
평화교육방법론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평화교육의 전망과 과제

일 시 : 1999년 4월 28일(수) 오후 3~6시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4층)

주 최 : (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교육방법론 개발을 위한 심포지엄

평화교육의 전망과 과제

일 시 : 1999년 4월 28일(수) 오후 3~6시

장 소 :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4층)

주최 : (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심포지엄 순서

사회 : 이은선(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교육위원장, 세종대 교수)

15:00 ~ 15:15 등록

15:15 ~ 15:45 기조발제 고병현 (성공회대 교수)

15:45 ~ 17:00 토론 김윤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정용민 (한우중학교 교사)

강순원 (한신대 교수)

윤명선 (다솜학교 교장, 공동체문화원 원장)

윤미향 (총일부 경북기획과 서기관)

17:00 ~ 18:00 종합토론

자료집 목차

❶ 기조발제

- 평화교육의 방향과 과제 / 고병현(성공회대 교수) 7

❷ 토론

- ▷ 토론 1 23
평화교육과 여성 / 김윤록(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 ▷ 토론 2 31
평화교육의 사례분석과 평화교육 방법론 개발 / 정동민(전호중학교 교사)
- ▷ 토론 3 41
평화교육의 외국사례와 국내 평화교육에의 적용 / 강수원(한신대 교수)
- ▷ 토론 4 45
여성평화교육의 방법과 프로그램 제시 / 윤명선(다솜학교 교장, 공동체문화원 원장)
- ▷ 토론 5 55
평화통일교육의 제도적 장착방안 / 윤미용(통일부 경책기획과 서기관)

❸ 종합토론

평화교육의 방향과 과제

- 실천적 평화교육을 위한 철학적 기초 -

고병현 (성공회대 교수)

1. 증명되지 않은 교육신화 깨기

역사적으로 인간의 태도와 품성을 변화시켜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해 보고자 했던 교육실천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말로 효과가 있었던 경우를 별로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직접 '행동'에 어떤 작용을 가하여 '의도한 행동변화'를 유도해 보겠다던 '행동주의 교육관'¹⁾은 그 '비인간적'인 속성으로 인해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인간의 가치, 태도, 품성의 변화, 그리고 그를 통한 행동의 변화를 지향하는 기존의 교육실천들, 특히 도덕교육이나 윤리교육은 실제생활에서 '사실로 증명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가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면 행할 것이다'라는 것이다. 물론 지식이 일정정도 축적되면, 그것이 그 사람의 행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행동변화를 이끌어 내지는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는 유네스코 교육연구소(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가 몇몇 회원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연구에서도 밝혀졌는데, 그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어떤 사회문제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과 그

1) 인간의 성격, 지능, 지식은 모두 행동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행동기준을 만들어 상별 등의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훈련시키면 인간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존히 웃슨과 스카너로 대표된다.

사회문제에 대해 실제로 어떤 태도를 갖는 것 사이에는 이렇다 할 분명한 상관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알고, 그 원하는 것(목표)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도 알고 있지만, 예전히 그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무엇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 전혀 연결되지 않은 경우를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늘 목격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평화'와 같은 추상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이 적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가급적 대중교통수단 이용하기'와 같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닌, 매우 개인적인 것이고, '가야할 곳'(목표)도 혼란의 여지가 전혀 없이 매우 분명하며, 또 목표를 달성하면, 그 '행위자'가 확실한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평화'처럼 그 이해부터 매우 혼란스럽고, 지향하는 목표점이 서로 틀리며, 종종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해져서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그 '행위의 주체'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평화'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지향해야 할 가치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평화'라는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혼신적인 실천을 하려라고 기대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일 수 있겠는가! 전쟁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아가 인류 전체에게 얼마나 엄청난 해악을 끼쳐 왔는가를 너무나도 잘 '알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것이 문명 군인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부녀자들까지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나라들이 할 수만 있다면 더욱 가공할 무기들을 가급적 많이 만들어 수출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것이 둘이킬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을 훼손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생활하나 쓰레기, 공장 폐수를 함부로 방류하고, 또 산을 깎아 꿀프장을 만든다. 오존정보가 자주 내려지는 것을 '알면서'도 예전히 '나홀로 차'는 줄 아들지 않고, 빈발하는 이상기온이 지구 곳곳에 엄청난 재해를 낳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환경보존은 여전히 개별논리에 밀리고 있다. 또 우리 민족이 바로 그런 식으로 당해 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차별하고 학대한다.

우리 사회가 이미 오래 전에 '고학력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살기에 이전보다 훨씬 더 살벌하고 각박한, 인정과 기본적 윤리, 도덕이 떼말라 가고 있다. 무한질주의 '인터넷 열풍'을 통해 '앎의 질'은 넓어 가지만, 인간다운 삶의 터전은 좁아만 가는 모순적인 사회, 사교육비가 우리 교육을 망친

다면 서울대 총장이 엄청난 고액과외를 시키는 사회, 범을 만드는 사람이 불법을 자행하는 사회,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한 자구(自救)적 '불법'에 는 무리한 강경 대응을 밥먹듯이 하는 사회 … . 이제 이 모든 개인적, 사회적, 구조적 모순들이 우리 사회를 'IMF시대'로 밀어 넣었고, 그래서 견례 없는 강도로 우리의 일상적 삶이 뒤틀리고 있다. 우리들의 삶이 없기에 '평화'를 말하는 것이 사치스럽게 들리는 세상, 무자비한 '시장의 정글법칙' 하에서 살아 남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이기에 '평화'를 들먹이는 것이 거추장스러워지는 세상이 되어 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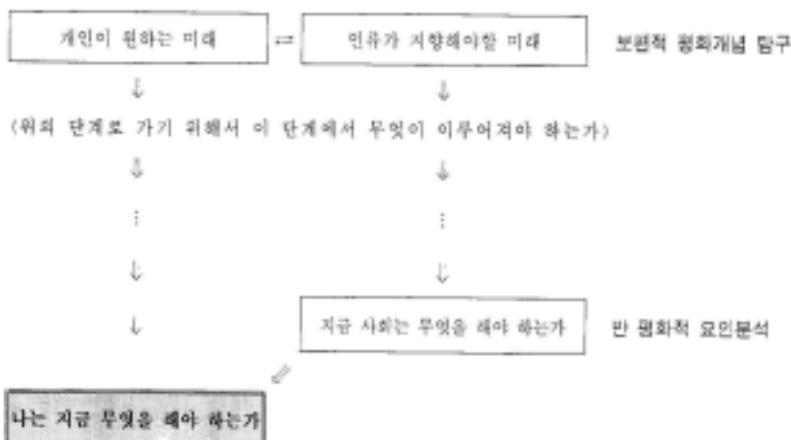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실패가 증명된 학교의 도덕교육, 윤리교육의 방식을 평화교육마저도 탑승한다면, 도덕교육, 윤리교육이 다 사람 만들자는 것인대도 우리 사회는 날로 살벌해지고 있듯이, 평화교육도 사회변혁과는 무관하게 겉으로는 사회적 관심을 받지만 이내 곧 사라지거나, 아니면 '박제된 암'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우리 머리 속 '지식박물관'의 한 구석을 차고 들어앉아 버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살 맛나고 평화로운 사회 건설을 꿈꾸는 교육은 무엇보다도 매우 영향력 있는, 그러나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결코 증명되지 않은, '가르쳐 준대로 행동할 것'이라는 교육신화에서 깨어날 때 비로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미래에 대한 꿈이 교육에 선행한다

그러면 이론적이고 관념적이지 않은 평화교육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평화를 위한 교육은 무엇보다도 그 교육을 통해서 다루는 내용이 철저하게 학생들의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학생들 스스로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꾀부 적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림 1>은 언뜻 보아 '나'와 관계없는 사회적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느낄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시각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개인>

<사회>



<그림 1: 우리의 미래, 나의 실천>

<그림 1>의 특징은 계획을 짤 때 흔히 하는 것처럼 '현재에서 시작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방식과는 정반대로, 개인이 꿈꾸는 미래, 인류가 나이가야 할 미래를 먼저 그려보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아내는, '미래에서 현재로' 단계적으로 내려오는 방식이다. 언뜻 보아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전자의 방식은 미래의 '내용'도, 그 미래에 이르는 길의 선택도 온전히 그 미래를 설계한 사람(실천가)에게 달려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나의 꿈'은 처음부터 '우리의 꿈' 속에 녹아 있기 때문에, 지향하는 미래가 이미 공동체적이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실천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인식하고 성실히 수행하는 것, 달리 말하면, 개인이 역사적으로 주어지는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다는 점이 근본적인 차이이다.

흔히 미래에 대한 계획을 짤 때면, 현재 여건이나 능력, 관심, 이해관계 정도 등을 고려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선택'한다. 또한 애초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면, 목표달성을 시기를 늦추거나, 다양한 '선택 가능한 미래상' 중에서 좀더 실현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파상적 공세 앞에 절대적 반론이 확산되고 삶 자체(인간적인 삶은 고사하고)가 위태로워진 지금, 인류의 오랜 이상으로서의 '평화로운 세상'은 하다 안되면, 가능한 '다른 세상'으로 맞바꿀 수 있거나 그 실현을 가능할 때까지 무한정 늦출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광장에서 하는 '생산목표'처럼 하다 안되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그 실현이 늦어지면 그만큼, 우리 중에 누군가가, 혹은 우리 모두가 그에 따른 고통을 어떤 식으로든 필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그 실현을 한시도 늦춰서는 안 되는, 그런 '목표'인 것이다. 그래서 '평화로운 세상 건설'과 같은 것을 '목표'로 하였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에 왔던 것처럼 현재의 재정상태를 따져본다거나, 인력, 학연, 자연 등을 고려한다거나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평화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는 능력'과 그 '꿈을 이루어 보겠다는 의지와 성실', 그리고 그 실현과정에서 함께 해야 할 '이웃', 같은 공동체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가 중요해 진다. 그래서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전자에서는 일사불란한 지도력이 중요하지만 후자에서는 구성원 모두가 목적지를 향해 함께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에서 현재로'의 방식의 최대 장점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해 줄다는 것이다. 이 방법은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꿈'이 녹아 있는 '우리가 함께 지향해야 할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미래'가 실현되기 위해서 바로 그 천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혹은 만족되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최종적 단계로서의 '미래'에서 출발하여 '현재'로 내려오면서 각 단계별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는 '현재'에 다다라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제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처럼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곧바로 '나의 꿈', '우리의 미래'를 실현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그림 1>에서는 편의상 개인과 사회를 나누었지만, 앞서 지적한대로,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를 생각해 보지 않은, '개인이 바라는 미래'는 이기적인 삶이 되기 심상이고, 개인의 욕구가 반영되지 않은 '미래'는 전체주의적일 수 있다. 따라서 '건강한 미래'는 처음부터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가 하나로 조화롭게 녹아 있는 '미래'이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단계에서 '사회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결국 그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는 궁극적으로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로 귀착된다고 하겠다.

이렇듯 먼 '미래'가 지금 현재의 구체적인 '실천 과제'로 다가오고, '미래'와 '현재'가 유의미하게 연결되는 것을 예개로 '나'와 별 관계가 없었던 '사회'문제가 '나'의 문제로 느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인권과 평화'와 같은 '추상적'인 가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을 할 준비가 되었다고 하겠다.

3. 평화교육은 평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앞에서 지적한대로 평화교육은 한편으로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막상 구체적인 작업으로 들어가다 보면 혼란스럽고 마음먹은 대로 쉽게 풀어 나갈 수 없는 때가 많다. 그리고 그 이유로 흔히 '평화'나 '평화교육'의 개념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떠올리지만, 사실 '평화'의 개념이 다양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시·공간적으로 '평화'에 대한 이해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은고 우리가 평화를 이해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 그리고 그 평화에 근거한 평화교육은 그것이 필요하게 된 맥락에서 이해되고 정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배경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마디로 정의 내려진 특정한 평화의 개념을 베타적으로 고집하는 평화교육은 그 자체가 이미 반평화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다양한 평화관, 혹은 평화교육관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것만을 절대화하여 남의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다양함을 수용하는데 있어서의 경직된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평화를 위한 교육'이 시기별로, 또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부단히 행해져 왔음을 목격한다.

평화교육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 근본 이유는 아마도 성격상 처음부터 심리학적으로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학교와 사회환경 속에서 평화와 인권의 가치와 태도를 형성시켜야 하는 역설의 교육이라는 사실에서 찾아져야 할 것 같다. 또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생활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현실과 매우 가까워야 하는데, 학생들을 등급 평가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비하고, 전체 학생의 %를

2)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고병원, 25쪽), 「평화, 평화교육의 종교적 이해」(서울평화교육센터 편), Education for Peace(Gordon, H. and Grob, L.) 등 참조

'능력부족'이라고 판정할 수밖에 없는 학교구조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비판적으로 '읽고 쓸' 수 있게 허용할 리가 만무하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교내 폭력의 문제도 사실은 우리 사회의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 사회에서의 학교 폭력은 이미 도를 넘어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단지 총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 있을 뿐이지 빙도나 피해 정도는 이미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미국 사회가 학교에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지역 경찰을 학교에 배치하고, 교복을 강제로 입게 하고, 마약거래나 폭력과 같은 비행을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듯이, 우리도 담당 경찰을 배치하거나 지역 경찰과 연계하여 방법을 강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해병전우회가 학생들의 등하교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 방식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강경 대응 방식은 '학교에서 왜 폭력이 발생하는가' 하는 가장 기초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이러한 강경 대응 방식을 지지하는 교장이나 교사, 학부모들은 비행 충동을 단호하게 진압함으로써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모든 학생이 이익을 보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까지 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학생들의 숫자를 다 합한 것보다 더 많은 희생자를 냈던 미국 덴버지역에 있는 콜럼비(Columbine)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제폭탄 투척과 총기난사 사건은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가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개 학교 폭력은 절대적으로 나쁜 학생들이 저지르는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하는데, 가령 '나쁜 학교', '나쁜 사회'가 더 큰 문제일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별로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소위 비행청소년이라고 하는 아이들의 행동유형이라는 것을 보면 보통 성인들의 일상적인 생활 내용과 꼭 닮았다. 사회는 폭력과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되어가며, 부모는 아이들에게 '총'이나 '팔' 같은 무기류 장난감을 사주는 상황에서는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놀기'를 바라는 역설은 결코 실현되지 않으며, 남에게 양보하고 좌하게 살면 결국 자기만 손해보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적인 경험인 평화교육은 '늘 듣는 소리' 그 이상이 될 수 없다.

실로 평화교육은 평화 안에서, 평화의 문화 속에서 실천될 때 그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 꿩중파를 통해서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주문(呪文)을 매일같이 외워서 우리 아이들에게 '경쟁 이데올로기'를 조직적으로 세뇌시키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특히 모든 사람이 '경쟁력 강화'만이 삶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IMF시대에 교육만이라도 경쟁이 초래하는 "심리적 손실과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손실”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경쟁을 거부하는 교육을 치향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품성과 전면적 발달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사회적 차원에서는 공동체 실현을 위한 정신적 기초를 쌓는 작업이며, 새로운 평화교육의 실천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평화의 문화를 만들 것인가?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평화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사나 부모의 강건한 의지로서 타개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 실천과정에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의 가능성이 ‘실천’ 그 자체를 가로막게 해서는 안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실천’과 ‘이론’의 관계에 대해서 이중적인 사고를 한다. 관념적으로는, ‘실천’이 올바른 ‘이론’을 놓고, 그 ‘이론’이 다시 보다 나은 ‘실천’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일단 많이 ‘해봐야’ ‘어떻게’ 하면 잘 지를 알게되는 데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달리 말하면, 이론)를 모른다고 해서 무언가 하는 것(실천)을 자신 없어 한다. 평화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은 실천 과정에서 창출되는 것이다.

평화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삶과 접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우리의 아버들이 가정에서, 교실에서, 사회에서 겪는 반평화적, 반인권적 경험은 그 종류와 내용에 있어서 다양 각색할 수 밖에 없다. 나이에 따라, 사는 지역에 따라, 가정 형편에 따라, 성에 따라 개개인이 겪는 갈등은 서로 다르며, 또 같은 종류의 경험에 대해서도 같은 형제·자매가 느끼는 감정이 서로 다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에) 앞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평화교육을 실천하려는 교사나 부모에게 소위 평화교육, 인권교육 전문가의 임무요연한 지시나 ‘처방’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는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해 보려는 교사나 부모들이 느끼는 처음단계에서의 막막함은 바로 그 프로그램, 혹은 교육이 시행될 맥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교사와 부모들의 과감한 실천을 통해서 타개

3) 알피 존, 308쪽. 알피 존에 따르면, 경쟁옹호론은 대체로 네 가지 신화(*myth*) 위에 구축되어 있다고 한다. “경쟁은 삶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인간성의 일부”라는 신화, “경쟁이 우리로 하여금 혁신을 다하도록 만든다”는 신화, “경쟁은 즐거운 시간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아닐지라도 가장 좋은 방법을 제공한다”는 신화, “경쟁이 인격을 키우고 자신감을 얻는 데 좋다”는 신화가(알피 존, 14-15쪽) 바로 그것이다. 알피 존은 자신의 책 『경쟁을 넘어서(No Contest)』에서 경쟁옹호론의 도태를 이루는 이 네 가지 신화를 매우 세밀적으로 분석·비판하고 있다.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또 그것만이 유일한 타개책이다. 이는 외국의 경험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예기치 못한 시행착오가 학생들에게 둘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준비가 철저해야 하는데, 이는 소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가 아니라, '현장'과 '이론'이 함께 만나, 실천할 교사나 부모가 교육목표 설정과 교안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이론가나 전문가들은 그러한 교육과정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평화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결국 평화교육의 성과는 초기단계일수록 그 교육을 진행하는 사람의 자질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평화교육은 사회변혁을 지향한다

평화교육은 기본적으로 정치교육과 가치교육의 성격을 갖는다⁵⁾. 평화교육의 정치교육의 성격을 갖는다함은 평화교육이 다루어야 할 3가지 학습목표인 '지식', '기술', '태도'(혹은 가치)와 중에서, '지식'과 '기술'은 넓은 의미의 정치의 마당인 삶에서 겪게되는 현실적 갈등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자율적으로 자신의 의사로 결정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평화교육이 가치교육의 성격을 갖는다함은 자율적 비판의식을 통하여 인식된 문제에 특정한 해결방향을 주는, 특히 환경, 핵, 전쟁과 같은, 인류를 근본적으로 말살시킬 수 있는 총체적 위기상황에서 개인적, 집단적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인류의 지속적인 삶과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의 공동노력을 가능하게 해주는 대안적 가치를 모색하고 교육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바로 이 사회변혁 지향성에서 평화교육이 다루어야 할 주제들

-
- 4) 이는 꽤으로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본 때, 우리의 교사나 부모는 평화교육을 하기에는 너무나 멀다. 교사, 부모 자신들부터 평화나 인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별 관심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는 "교사"와, 가정에서는 "부모"와 가장 심한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평화교육을 담당할 사람인 기존의 것과는 다른 대안적 가치에 기초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어했을 때는 평화교육은 결코 사회변혁적 힘을 갖지 못하게 된다.
 - 5) 이에 대한 좀더 자세한 논의는 고병현의 논문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참조
 - 6) 평화교육의 학습목표인 '지식', '기술', '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고 병현 역)과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고 병현) 참조

이 나온다.

약간 과장하여 표현하자면, 평화교육의 역사는 인류사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한 인간의 역사가 전쟁과 폭력으로 점철되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리 소수에 의해서라도 평화로운 사회에 대한 '꿈'은 단 한순간도 포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가 긴 만큼, 그리고 인류가 겪은 문제를 시·공간적으로 다양한 만큼 평화교육이 다루고 있는 주제 역시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가, 20세기로 국한하여 큰 줄기만 짚아보더라도, 서구에서의 평화교육은 크게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과 6~70년대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한 비관적 평화교육을 중심으로 하여 다양한 이념으로 전쟁과 인권, 상호 이해 등의 문제를 다루었고⁷⁾, 냉전체제가 맹위를 펼치는 시기에는 '반전'과 '반핵'이 평화운동이나 평화교육이 다루는 중심 주제였으나 1989년 이후로는 환경문제가 최우선의 관심사로 부각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인종과 민족, 종교적 갈등, 전쟁, 개발, 성장과 같은 문제들도 함께 심각하게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경제적 세계화와 정보화, 신자유주의, 그리고 그로 인한 불균형한 부의 분배와 빈곤의 문제, 생명공학의 발달과 인간복제 등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직업교육이나 노동조합교육과 같은 주제들도 평화교육에 포함되게¹⁰⁾ 되었다.

제3세계 평화교육 내용은 서구의 것과는 약간 다르다. 환경이나 전쟁, 핵문제 등은 전세계적으로 공통의 관심사이지만, 역사적으로 강대국에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종속된 경험의 영향으로 삶이 뒤틀려있는 만큼 제3세계 평화교육은 전통적으로 '민족해방교육'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여기

7) 물론 이외에도 많은 주제들이 평화교육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성차별이나 군사문화, 소비문화 등의 주제는 오래 전부터 평화교육의 중심 주제이었고, 아직은 미미하지만 '동물권(animal rights)'이나 동성애, 언어적 폭력,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적으로 재생산되는 폭력문화 등 매우 많은 문제들이 평화교육의 주요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계간지인 PEACE REVIEW는 최근 세 계적으로 어떤 평화 관련 주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된다.

8) 국제이해교육에 대해서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기획한 「국제사회와 국제이해교육」을, 유네스코의 국제이해교육의 역사와 성격에 대해서는 광은 책에 수록된 "평화문제와 국제이해교육"(고병현)을 참조

9) 평화교육의 역사에 대해서는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고병현) 34-47쪽을 참조

10) 베리 듀포(Barry Dufour)가 전집한 The New Social Curriculum 참조

에 군사문화, 인권, 개발, 구조적 폭력¹¹⁾ 등의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어서는 개발과 신자유주의, 소비주의¹²⁾, 벤처, 공동체 등의 문제를 아시아 지역연대를 통하여 평화운동과 평화교육, 혹은 대안운동과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루기 시작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일제 식민지하에서는 민족해방교육이, 해방 이후에는 생활야학과 노동야학, 친보적 교사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의식화 교육'과 통일교육¹³⁾이 평화교육의 주축을 이루었고,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에서 볼 때 평화교육의 위치에 걸맞은 교육실천의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미에서의 평화교육은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일부 교사, 시민단체에 비로소 알리지기 시작하는데, 비슷한 정치, 경제적인 조건에 처한 사회에 비하면 매우 늦은 것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사상적으로 매우 정직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고, 한국 평화교육의 앞날이 매우 지닌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상의 정직성은 필연적으로 사회의 폐쇄성으로 연결되느니 만큼, 그동안 사회문제가 제대로 정직하게 노출되어 본 적도, 또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건강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경험될 적도 거의 없는 우리의 경우에 한국적 평화교육의 정체성을 확립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IMF체제 이후에 노골화되고 있는 사회의 보수화, 경직화, 문극화 현상이 지속·확대된다면, 대처정부 시절에 영국의 평화교육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의 기득권 층의 강력한 견제와 반대로 평화교육이 뿌리조차 내리지 못할 가능성도 명명히 있다.

평화교육의 발전 가능성은 늘 그 속에 내재한 사회변혁적 힘과 정비례한다. 따라서 평화교육이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정부의 재정 지원이라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 사회의 근본 모순을 비껴서 주변적인 것들만을 다루게 된다면, 이는 사회변혁적 힘을 약화시킴으로써 자신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평화교육은 그것이 사회교육 차원이든 학교교육 차원이든 반드시 그 사회의 근본 모순을 최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서구 국가들에서조차도 평화교육의 위상은 늘 불안했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평화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평화의 의미는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기 때문에 평화를

11) Toh Swee-Hin과 Virginia Floresca-Cawagas, viii쪽

12) Sulak Sivaraksa의 책 *Seeds of Peace* 참조

13) 여기서 말하는 통일교육은 과거 정부나 관변단체가 주도한 반공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는 "통일을 만드는 평화교육"(고병현)을 참조

위한다는 미명하에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을 피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다함에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평화에 대한 보편적 이해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평화의 보편적 개념 정립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노력 과정이 오히려 평화교육의 사회변혁적 기능을 대체해 버림으로써 그 생명력을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평화관을 정립하려는 노력보다는 '지금 내(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아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평화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는 달리 표현하면 <그림 1>에서 보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고, 이는 결국 다음 단계가 '있기' 위해서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는가', 즉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경험되는 반평화적, 반인권적 요소가 곧 평화교육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반평화적 요소(혹은 모순)는 종종적으로 누적되어 있고, 무질서하게 표출되고 있으며, 그 유형을 대충 짚어봐도 아래와 같다.

- ① 분단, 군사문화, 그리고 이와 연관된 문제들 (군비, 군대내 의문사, 대연지회, 등)
- ② 경제적 세제화와 그에 따른 희생, 실업, 빈부격차의 심화 등
- ③ 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 특히 석유자급률의 급격한 하락
- ④ 성차별, 지역차별, 학력차별, 인종차별(미주노동자와 조선족에 대한 차별), 징역연차별 등
- ⑤ 가족과 관통의 해체
- ⑥ (과)소비문화의 확산
- ⑦ 자본과 과학의 결합, 정보화에 따른 부작용 (유전자 복제, 유전자 조작 식품, 등)
- ⑧ 교육의 과정과 공교육의 실종 (교육의 공적 기능의 현저한 악화)
- ⑨ 국가와 개인, 집단과 개인, 개인과 개인, 혹은 종(種)과 종(種) 사이에 나타나는 인권침해, 인권침해, 혹은 권리침해 (불법집회, 죽음사용,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의학 학살 실험, 생물무기를 사용한 원상 살현, 죽은 자의 인권, 등)

이상의 주제들은 그 성격에 따라, 교육대상 연령층에 따라 교육방식이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생태계 파괴'에 대한 교육은 사례 중심, 과학적 지식 전달 중심의 교육방식이 무방하지만, 저학년을 상대로 한 '분단' 문제는 이제까지처럼 문단의 책임논쟁이나 통일의 당위성 주장의 방식으로는 효과가 없고 교실에서 서로 다른 가정환경, 서로 다른 성장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서로 잘 화합하고 협동하며 공존할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전해주 는 방식의 대안적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그리고 똑같은 통일교육이라도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면 북한에 대한, 그리고 분단의 원인과 갈등의 본질에 대한

정화하고 균형 잡힌 정보와 지식의 제공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공동체적인 삶'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사회적인 쟁점을 교육대상에 맞게 고유적 언어로 바꾸어서 가르쳐야 한다.

5. 시민단체가 평화교육의 주체로 서야한다

세계적으로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날, 세계는 '이제 비로소 평화가 찾아왔다'는 희망을 나누었지만, 그것도 잠시뿐, 냉전 이데올로기가 떠나간 자리에 이전보다 더욱 잔혹한 민족과 인종, 종교적 분쟁이 들어섰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에 분쟁을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려는 평화교육도 함께 생겨났다. 그런데 분쟁과 갈등이 한창 진행 중이거나 그 후유증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에서의 평화교육은 사회적으로 상대적인 안정을 누리고 있는 서구의 평화교육과는 접근 방식이 예레 가지 면에서 다르다. 특히 평화교육의 주체 면에서 그렇다. 서구의 평화교육은 사회교육이나 시민교육 차원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제도교육에서 주로 시도되면서 각 사회운동 단체는 각각의 주요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갈등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분쟁의 후유증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에서의 평화교육은 학교보다는 주로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사회교육, 시민교육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어 거꾸로 학교에 영향을 주게 되고, 사회운동 단체도 각각의 주요 문제영역을 넘어서 공통적으로 평화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경향이 생긴다는 차이가 있다. 즉 분쟁 지역인수록 역설적이게도 학교보다는 시민단체가 평화교육을 훨씬 더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랜 동안 민족간 갈등을 겪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분쟁 지역에서는 '아담연구소(The Adam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eace)'¹⁴⁾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의 교사들과 학생들이 서로 만나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고, 종교간 분쟁의 형태를 띤 북아일랜드 지역에서는 '코리밀라공동체(Corrymeela Community)'와 같은 민간단체들이 북아일랜드 교육부(DENI: Department of Education for Northern Ireland), BBC 방송국, 북아일랜드 퀸스대학교(Queens University)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교육 프로그램¹⁵⁾을 개발하여 평화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인종간 갈등으로 엄청난 비극을 겪

14) '아담연구소'는 'KOL ADAM'이라는 소식지를 발간해서 연구소가 주관하고 있는 '아랍-이스라엘 만남'이라는 성인과 아동을 위한 다양한 평화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15) 북아일랜드의 대표적인 평화교육으로는 '이류(EMU: Education for Mutual

었던 크로아티아의 경우에도, 지금은 거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크로아티아 전쟁이 발발했던 해인 1991년에 설립된 '크로아티아 반전 캠페인(ARK: Antiwar Campaign Croatia)'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평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있으며, '국제지뢰금지운동(ICBL: International Campaign to Ban Landmines)'과 이 단체의 책임자인 조디 윌리엄스(Jody Williams)가 인터넷을 통한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전세계적으로 대인지뢰금지운동¹⁶⁾에서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킴으로써 1997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외에도 다른 이름이지만 환경, 인권, 반성차별, 반인종차별, 반핵 등 평화와 관련된 많은 영역에서의 교육 프로그램들 중에서 대부분이 학교보다는 시민단체에서 주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주제들을 다루기에는 '학교'라는 기관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각 사회 부문운동들의 운동 목표가 사실은 시민을 상대로 한 평화교육(혹은 여러 가지 이름의 평화를 위한 교육)을 통해서도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전세계의 모든 문제를 다 끌어안고 있다고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반성차별 교육과 환경교육, 그리고 최근 들어 인권교육 영역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평화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곳은 아직 없다. 물론 모든 것이 평화 교육으로 수렴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환경이나 차별, 인권 등 각 부문별 주제를 접근할 때 각 부문 영역들이 지향하는 가치들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피하

Understand)'라고 하는 '상호 이해 교육'이 있다. 현재 북아일랜드에서는 학령 아동 중에서 약 95%가 카톨릭 계의 '정부 보조 학교(maintained school)'와 프로테스탄트 계의 '정부 관리 학교(controlled school)'에 다니고 있고, 단지 3% 정도만이 양쪽 학생들을 통합교육하는 '통합 학교(integrated school)'에서 공부하고 있다. 따라서 제도교육에서의 평화교육은 아직도 요원하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양쪽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사들, 학부모들은 통합교육의 필요성을 빌로 느끼지 못한 분분더러 오히려 반대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그러나 양쪽 아이들이 얼스터 민속박물관(Ulster Folk Museum)에서 같이 학습하고 공부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연수 프로그램이나 '이류' 프로그램이 사회교육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제도교육으로도 조금씩 확산되고 있는 것은 민간단체들의 원천적인 평화교육 실천 노력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류' 프로그램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북아일랜드의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이병곤)을 참조.

16) Baranovic, 1쪽

17) 대인지뢰금지운동에 관한 정보는 「대인지뢰금지, 현실과 과제」(한국기독교 회문제연구원 편)를 참조.

기 위해서 '부문'을 넘어서는 '전체'적 관점에 서야한다는 필요성과, 운동은 주체의 변화를 통해서 그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운동은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기 위한 교육적 작용에 기초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한국 시민단체들이 평화교육의 역할과 가능성에 새롭게 관심을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6. 시민단체에 대한 몇 가지 제안

앞에서 지적했듯이, 사고가 경직된 사회에서는 학교보다는 시민단체가 평화교육의 정착과 발전에 훨씬 더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다행히 우리 사회에서도 환경, 인권, 여성 분야에서의 시민단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아직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지만 평화라는 이름으로도 간간이 모임이 꾸려지고 있다. 이제 이 땅에 평화교육을 건강한 실천하기 위하여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와 같은 평화교육 관련 단체들이 다음과 같은 사안에 관심을 보일 것을 제안한다.

첫째, 평화교육을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여야 한다. 평화 관련 시민단체들은 그들이 꿈꾸는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아울러 시민단체 활동가들, 평화교육 교사들은 평화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바람직한 삶'을 먼저 살도록 해야 한다. 평화 관련 교육이나 운동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이유 중의 하나가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칠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평화교육과 같은 교육은 교사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 이루어진다. 공동체적인 삶, 나누는 삶을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먼저 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교육의 교육 방식이다.

둘째, 기존의 것과는 다른 통일교육을 해야 한다. '반공교육'도, '북한 바로 알기'도 통일을 담보하지 못한다. 대안적 통일교육은 '공존교육'적 성격을 지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과 북의 '함께 살기'는 남쪽에서의 '함께 살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간, 계층간, 종교간, 서로 다른 성과 인종간의 공존, 이주 노동자들을 보살펴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사회적 운동으로 일어나야 하며, 이것이 바로 대안적 통일교육의 시작이다.

셋째, 제도교육의 교육이념이 평화로 대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압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제도교육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종교기관부터 신자교육이나 성직자 양성교육 교육과정에 평화교육을 도입해야 한다.

넷째, 평화박물관 건립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박물관의 '기억의 땅'이다. 그

언제 우리는 ‘기억의 댄’에 어떤 기억을 보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는가? 부끄럽게도 우리 사회에는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죽였는가,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의 삶과 가정, 문화를 어떻게 파괴했는가 하는 기억을 담고 있는 박물관이 대부분이며, 우리 사회를 더 나은 사회로, 평화가 더 충만한 사회로 만들려는 작지만 귀한 실천들을 보관하는 박물관은 거의 없다. 따라서 평화박물관 건립운동은 지금으로써는 전체 시민을 상대로 하는 가장 구체적인 평화교육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비무장지대에 ‘평화학교’를 건립하자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반평화의 가장 큰 상징을 평화의 상징으로 바꿈으로써 우리 사회의 평화운동, 평화교육의 실천 원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평화학교’를 건립한 후에 일정 수의 남북 어린이들이 교대로 2-3일씩, 혹은 일주일씩 함께 기숙하면서 생활하게 함으로써 남북 어린이들 삶으로부터 실질적인 통일을 가꾸어 갈 수 있게 될 것이며, 아울러 아시아, 세계의 중심적인 평화센터로도 기능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병현 (1998), “통일을 만드는 평화교육”, 『처음처럼』, 1998년 9-10월호(통권 제9호), 51-75쪽
——— (1996), “평화문화와 국제미래교육”, 『국제사회와 국제미래교육』(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편), 서울: 정민사, 193-217쪽
——— (1994), “평화교육의 성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평화교육의 이론과 실천”, 서울: 서원
박보영 (1998), “평화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울평화교육센터 편(1995), 『평화, 평화교육의 종교적 이해』, 서울: 내일을 여는 책
알피 편(1999), 『경쟁을 넘어서[No Contest]』, 서울: 비봉출판사
이병근(1998), “북아일랜드의 상호 이해를 위한 교육”, 『처음처럼』, 1998년 9-10월호 (통권 제9호), 76-94쪽
Baranovic, Branislava, “Peace Education in Croatia”, PEACEBUILDING, February 1999, Vol. 2(Issue 2), pp. 1-2 & 29-30
Dufour, Barry(ed.), The New Social Curriculu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Elias, Robert(ed.), PEACE REVIEW, Oxfordshire, Carfax Publishing Ltd.
Gordon, Haim and Grob, Leonard(eds.), Education for Peace, New York, Orbis Books, 1987
Sulak Sivaraksa, Seeds of Peace, California, Parallax Press, 1992
Toh Swee-Hin and Virginia Floresca-Cawagas, Peaceful Theory and Practice in Values Education, Quezon City, Phoenix Publishing House, Inc., 1990

평화교육과 여성

김윤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1. 들어가면서

'평화교육'과 '젠더(gender)'를 접목시키는 일은 중요한 테마이다. 그것은 월반적으로 '사람'에 대한 인식이 주로 남성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평화연구에서 "인간은 왜 전쟁을 하는가", "인간은 왜 싸우는가"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여성은 침략이나 전쟁을 하지 않는다. 침략이나 전쟁을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남성이다. 세계역사에서 여성이 방위전쟁에 참가한 예는 많다. 해방전쟁에도 여성이 군인으로서 참가한 예는 많았다. 말하자면 적국이 자기나라를 침범하면 그것을 물리치기 위한 전쟁에는 여성도 참가하지만 여성만으로 조직된 군대가 이웃나라를 침략한 예는 역사에 없다. 그래서 전쟁에서 여성은 무죄라거나 희생을 당했다는 말을 들어왔다.

평화교육에서는 전쟁이나 폭력의 구조를 보게해야 한다. 즉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우선 남성조직이 없었다면 침략전쟁은 없었다. 여성이 없는 조직이 독립함으로 비로소 이웃나라를 침략할 수 있게 된다. 제일 극단적인 남성조직이 군대이며 이것이 자유롭게 활동하면 침략전쟁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왜 전쟁을 하는가'가 아니라 '남성은 왜 전쟁을 하는가' 그리고 '여성은 전쟁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되는가'로 나뉘어진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눈 앞에 두고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교육이 인간일반을 지칭하는 언어로 교육을 하면 거기서 여성은 보이지않고 존재하지도 않게 되고 여성의 평화

를 위한 교육은 누락될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교육 일반에서 '젠더'의 관점을 뛰 수적으로 수반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먼저 짚어야 할 점은 남녀평등과 평화의 문제는 일전 거리가 있어보인다는 점이다. 전쟁이나 국제분쟁은 국가간의 대립이 원인일 수도 있으나 민족 대립이나 민부의 격차 등의 사회적 요인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에서 전쟁과 평화의 문제를 그 사회적 기원으로 소급하여 고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을 고찰하는 것과 거의 같다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같은 사회적 요인이라 해도 성차별은 전쟁이나 분쟁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가 두 때로 나뉘어서 직대하며 폭력을 쓰는 사태 그 자체가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그러면 여성에 대한 억압이나 폭력이 많은 사회는 군국주의적 경향이나 폭력적 경향, 혹은 베트남의 적 경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대답은 아마도 그렇다일 것이다. 군국주의나 군사화의 강도는 통치엘리트의 이데올로기나 성격, 군산복합체의 존재, 경제발전의 수준, 민부의 격차, 계급구조, 종교, 정치문화, 지정학적 위치 등에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제2차대전 이전의 독일이나 일본처럼 군국주의적 경향이 강했던 사회에서는 성차별도 심해지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 할수 있다. 그러나 성차별이 그 강도를 결정짓는 가장 큰, 또는 중요한 요인은 아니다.

나아가서 평화연구의 관점과 페미니스트의 관점이 같다고 단언할 수도 없다. 유명한 이야기로 세계적 평화학자인 이반 일리치의 평화론은 남녀의 성별 역할을 긍정하고 있어서 페미니스트들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이 평화론은 산업 사회가 가진 거친은 폭력을 제거한 평화의 세계를 묘사해 내고 있는데 거기서 일리치의 평화로운 세계는 산업화 이전의 중세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 여성은 전통적인 역할속에 밀폐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꾸로 평화의 관점에서 성차별이 여성에 대한 구조적 폭력이라는 의미에서는 평화와 젠더의 문제는 접목이 된다. 성차별의 관점에서 평화문제를 말하려면 이질성이 드러나지만, 반대로 평화연구의 관점에서 남녀문제를 생각하면 비교적 쉽게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현실의 평화적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젠더와 평화연구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이 도론에서는 평화의 관점에서 젠더문제를 다른 평화교육의 테마두개(전쟁과 여성, 성차별의 구조적 폭력)를 간단히 언급해 보는 시론적인 시도를 하겠다. 여성학 교육의 테마나 방법론과 차별성이 있는 평화교육과 젠더에 대한 이론적 축적은 아직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2. 젠더관점을 가진 평화교육의 테마들 :

2-1. 전쟁과 여성

'현실의 평화적 변화'을 지향할 때, 여기의 현실은 무엇을 지칭할가. 여기서 이 현실이란 사회전반에 폭력이 구조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폭력적인 현실이 평화의 상태로 변화되도록 평화교육은 지향하게 되는데 이런 점에서 평화교육과 젠더의 관점은 일치한다는 것은 앞에서 말했다. 그런데 우리가 젠더의 관점을 가진 평화교육의 테마를 생각할 때 제일 명백하게 논의될 수 있는 것은 우선 '전쟁과 여성' '성차별과 구조적 폭력'에 대한 교육인 것이다.

탈냉전시대로 접어들면서 세계의 평화교육은 반전교육 보다는 구조적 폭력이나 환경교육에 치우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아직도 동북아의 평화문제가 몇 번이나 위기를 넘기고 있고 일본의 범적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평화교육 교과목에서 전쟁과 여성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뿐아니라 현재도 지역분쟁이나 민족분쟁은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전쟁의 가장 비열한 면으로서 염존하고 있으므로 이 테마는 아직도 세계적 평화교육의 테마라 할 수 있다.

2-1-1 여성들의 전쟁론

그동안 서구 여성들의 전쟁론은 적지않게 축적되어 있다. 근대이후 남성 중심의 사고체계 안에서 독자적인 사상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로자 븍嗝부르그, 에디트 슈타인, 세묜느 베이유, 한나 아렌트, 쥬리아 크리스티파 등 유대계 여성들이다. 그들의 사상은 전쟁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크리스티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세상을 엮으나 둑减排부르그에게는 제1차대전이, 슈타인, 베이유, 아렌트에게는 제2차대전이 큰 의미를 가졌다.

嬖减排부르그의 전쟁론은 20세기의 괴물이었던 제국주의전쟁이다. 그는 구미의 제국주의가 석민지쟁탈을 위해서 비구미지역에서 비열한 전쟁을 전개하고 있음을 비난했다. 그리고 제국주의 국가간에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논하며 민중을 희생시키는 제국주의전쟁에 반대하다가 국가의 손에 암살되었다.

에디트 슈타인은 전쟁을 궁정하는 사회계약적 국가론의 합정을 지적하고 타자에게 열려진 이성적 국가의 가능성을 추구한 여성이다. 그러나 독일국내의 격렬한 유대인박해로 직장에서 추방되고 결국 계슈타포의 손에서 아우슈비츠에서 학살당했다.

시몬느 베이유는 근대세계의 인간의 기계화의 극한으로서의 전쟁의 비인간성을 지적하고 있다. 스페인 내전을 위한 지원활동이 그의 전쟁에 대한 관여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치 독일의 침공과 점령의 경험, 유대인 여성으로서의 부조리한 운명에 맞서 싸우는 것이 베이유의 소원이었으나 결국 좌절한다. 그는 전쟁 하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하며 순교의 정신으로 식사를 거부하고 아사했다.

한나 아렌트는 나치 독일에서 미국으로 망명했다. 전체주의가 가져오는 전쟁의 관료성, 허구성, 폐타성을 분석한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은 여성의 쓴 전쟁론으로 최상의 작품이다. 그는 국가를 공적 존재, 개인을 사적 존재로 보는 근대적 공사 이원론의 거짓을 드러내어 근대국민국가론의 선구자가 되었다.

전쟁의 현실체험자였던 네 사람에 비해 불가리아에서 프랑스로 유학하고 후에 프랑스를 거점으로 활동한 크리스테파는 직접적인 전쟁론을 쓰지는 않았다. 그러나 ‘아브제시옹’론(論)이라고 말해지는 그의 폭력의 분석은 획기적인 것이다. 폭력적 충동의 내실을 폭로한 그 이론은 전쟁이나 폭력으로 치닫는 주체의 문제를 예리하게 논증하고 있다.

이들의 전쟁론에서 명백한 것은 전쟁의 불가피성을 논함으로 결국은 전쟁긍정론이 되는 남성들의 전쟁론과 달리, 전쟁의 불합리성을 논함으로 전쟁 논리의 해체를 촉진하는 전쟁론을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전쟁론’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면 평화교육에서 전쟁에 대한 여성과 남성들의 전쟁론의 차이점을 비판적으로 검토시키며 어느 편이 인류에게 유익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2-1-2 전쟁과 ‘성’

나아가서는 전시 하에서 여성은 놓는 성으로서 ‘생식의 성’의 관리를 받고, 구일본군의 성적노예제도인 종군위안부처럼 ‘페락의 성’의 관리를 받는다. 모두 여성의 성적 자유의 권리는 빼앗긴 것이다. 남성의 성도 교묘하게 국가나 권력에 의해서 관리된다.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유엔 인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는 ‘군사적 성노예제도’라고 정의하여 국제적 관심을 이드렸는데 이 문제를 평화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작업과 그것을 평화교육 과목으로 정향할 방법론을 찾는 작업은 현재 우리에게 시급히 요청되는 작업이다.

‘일본군 위안부’문제에는 현대의 우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전쟁범죄, 식민지주의, 전체주의, 국가책임, 인신매매, 국제법위반, 민족차별, 여성차별, 성의 이중규범, 여성에 대한 폭력, 성착취, 인권침해, 대량학살등이다.

이것은 모두 평화문제와 관련된다. 그러므로 '위안부'문제를 위의 구조적 폭력의 프리즘으로 보게하는 교과목짜기는 광범위한 주제가 될 것이다.

평화학에서 말하는 '구조적 폭력'이란 가해자나 피해자를 개인으로 특정할 수 없는, 그래서 폭력성이 직접 보이지 않는 상태인 것 같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전쟁시의 장간이라는 성적 폭력은 특정의 개인대 개인의 가해나 피해의 관계 만이 아니라 총체적인 남성대 여성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서 '종군위안부'의 상태로 국가관리가 되면 여성에 대한 남성의 폭력이 더 보이지 않게 되며 이것은 바로 가장 큰 구조적 폭력의 예인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와 여성'의 문제도 다루어져야 한다.

안전보장이라는 명목으로 근대국가 안에 '국가가 관리하는 조직화된 폭력구조'로서의 군대가 편입되어 있으며 여기서 근대적 성차별주의의 논리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근대국가의 지배시스템 안에는 '정의의 투사'와 '아름다운 영혼'이라는 이원론적 구도가 구조화되어 있다(J.B.엘슈타인). 이러한 성적 이원론에서 남성은 정의로운 전쟁을 치루는 '정의의 투사'가 되며 여성은 모성애의 화신이나 타자에 대한 원신에서 기쁨을 느끼는 '아름다운 영혼'의 주인으로 선화화 된다.

나아가서 '위안부'문제는 전쟁중에 적국의 여성과의 조직적 의도를 드러낸 예이기도 하다. 전쟁터의 장간은 주로 성욕자연주의(남자는 성욕의 땅어리, 성욕은 본능이라는 신화)로 경리되어 왔으나 이것의 숨은 의도는 1992년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났던 제노사이드적 전쟁장간의 격반로 드러났다. 93년도 비엔나에서 개최되었던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국제법정'에서의 증언은 세상을 놀라게 했는데 보스니아 여성들은 이러한 전쟁터 장간은 여성 개인에 대한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식능력에 대한 폭력이요 가족 재생산기능의 파괴, 적국의 종의 과과와 연계된다는 증언을 했던 것이다.

3. 성차별의 구조적 폭력

3-1 성차별과 패러다임전환

평화교육에서 성차별을 다룰 때 중요한 것은 '패러다임 전환'교육이다. 여기서 패러다임전환이란 새로운 사실을 발견한다거나 자기의 도덕적인 인식을 올바로 가진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눈 앞에 있었던 큰 사실의 의미를 비로소 발견한다는 뜻이다. 칼 마르크스의 패러다임전환도 노동자가 이미 존재했었지만 비로소 노동자가 있는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평화교육은 일명 '비판교육'

이라고도 한다. 비판적 시야를 통해서 비로소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남녀문제도 그러므로 이러한 비판교육으로 패러다임전환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성차별에 대한 구조적 파악의 중요성이다. 여성문제는 자기반성이나 도덕적인 면에서 고찰할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 안에 두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을 길드는 것이 필요하다.

3-2 매매춘과 폭력구조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매매춘이나 포르노산업등 성의 상중화가 기생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성차별, 인종차별, 남북문제의 요인이 있다.

첫째 남녀차별이 구조적인 요인이다. 남성은 성적인 향라이 용인되나 여성에게는 정조의무와 생식의무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매매춘에서도 사는 남성은 문제가 되지 않고 파는 여성만이 문제가 된다. 여성이 매춘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것, 사회에서의 여성고용상황의 저조한, 복지정책의 빈약함에 있다.

최근에 고용평등법이 성립되었지만 여성의 고용과 구조조정에 의한 실직은 심각하며 제주도나 서울의 판광기생의 수는 증가 일로에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으로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성별역할분업관이 사회의식으로 아직도 강하게 지배하고 있어서 이것이 노동정책이나 교육정책이나 복지정책에서 추천되고 있다. 지금 공창제도의 법제화를 달하는 국회의원이 생기고 있는 우리나라의 남녀불평등적 사회의식이 바로 매매춘은 남성에게 필요악이라는 의식이 그대로 온존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둘째로 남북문제가 구조적인 요인이 되어 있다. 이것은 특히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어가는 현사회에서 벤곤의 여성화현상이 심화되면 여성의 매춘을 낳고 지탱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로 인종차별도 매매춘의 요인이다. 이것은 남북문제와 연관되지만 기생관광이나 '위안부'문제에서도 들에났듯이 국적이나 인종이나 피부색으로 인간을 차별하는 것이 매매춘구조의 요인의 하나이다. '위안부'문제에서 보면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인 위안부는 1000엔, 조선인은 100엔, 중국인은 10엔 인도네시아인은 1엔이었다고 한다(內山愛子). 인종차별로 유명한 남아프리카에서도 여성의 인신매매와 유아의 인신매매가 심하다고 한다.

이러한 매매춘의 폭력적 구조에 대한 의식교육은 평화교육에서 남녀간의 민족적 평등적 인간관계구축과 공동체적 공존사회 만들기에서 중요한 주제이다.

도론자도 참석하여 한국의 기생관왕설체보고를 했던 '83년도 비엔나 유엔 '성노 예제소위원회'에서 토론되어 유엔인권위원회에 보고서로 제출되었던 "매매춘에 관한 특별보고서"(잔 페르낭 로랑)에서는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공업국의 매매춘 상황이 보고되었다.

이 보고서는 매춘부는 모두 가장 비열하고 과격적인 노예제에 강제로 복종당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포르노산업은 산업이 발달한 시장, 경제국가에서 발달되고 있고 거기서는 어린이들이 어린이매춘광들의 베일조직을 통하여 국내나 국제적 규모로 고가로 매매되어 있으며 색스 출이 있는 거리는 매매춘이 가장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성산업이 범람하는 곳에서는 많은 여성들의 인권침해, 어린이의 인권침해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녀간의 불평등, 국가간 경제의 불평등, 인종간의 불평등, 이 세 가지가 겹치는 곳에 매매춘이 구조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전쟁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폭력구조를 없애지 않는 한 매매춘이나 전쟁의 위기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평등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인권교육의 주제로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이다.

4. 방법론에 대하여

도론자에게 이론적 접근만 말기고 방법론과 실천은 다른 도론자에게 맡겨졌다고 하였으나 마지막으로 몇마디 언급하고 싶다. 평화교육을 어떤이는 내용적으로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한다. 1)전쟁비판으로서의 평화교육, 2)해방으로서의 평화교육, 3)학습과정으로서의 평화교육, 4)라이프 스타일로서의 평화교육 네가지이다. 여기서 1과 2는 어느 정도 카리큘럼 편성에서 명확하게 정착되고 있다고 말해지나 전쟁비판에서의 젠더관점의 누락이라는 문제와 해방교육에서의 민족해방만이 아닌 여성해방의 내용 등을 아직도 명확하게 평화교육의 과목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3과 4에서는 이러한 젠더관점의 평화교육은 형태심리학의 공헌이나 론데소리의 공동체지향적 방법의 도입이 도움이 될 것 같다. '학습된 중요와 폭력'에 대항하는 '학습된 평화행동', '학습된 사랑'의 방법은 평화교육에 필수적인 것이다.

평화교육의 사례분석과 평화교육 방법론 개발

정용민 (천호중학교 교사)

【 평화교육 실천과 한계 】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면서 평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지금의 구조적 질통에 의한 삶의 질곡을 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평화의 화두가 삶의 질에서 시작되듯이 경제성장에 기초하여 인권, 평화, 생명과 환경, 민주주의 등에 대한 시민적 의식과 삶의 실현의 요구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비록 우리의 현실만이 아니라 전지구적 삶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의 문제는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평화, 그리고 그 평화에 근거한 평화교육의 관심은 그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고, 실천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이러한 평화교육의 연구와 실천은 80대 말 냉전체제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통일 논의와 그에 기초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시도들이 맞물리면서 조금씩 소개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냉전체제의 종식이라는 세계적 변화에 맞추어 북한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의 당사자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통일교육은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교육적 관점에서 제조명되었다. 이렇게 1990년대 이후에 전개되어온 평화교육의 여러 시도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폭력, 모순, 혹은 갈등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진 적극적인 평화교육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서 평화교육은 평화교육, 환경교육, 생명교육, 통일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경향의 이론적, 철학적 바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평화교육에 대한 논의나 평화교육으로 실천되어지는 교육적 활동들은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었다. 이는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논의되어온 평화교육의 여러 서술들이 이전히 학교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써 교육되어지고 겹증받지 못한 결과에 기인할 것이다. 또한 시민영역에서도 구호와 선언이 앞서기만 하고, 구체적 교육프로그램의 실천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통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관용의 교육들은 그 멀방에도 불구하고 평화의식으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이 시도되고 있고, 평화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이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여전히 평화교육의 한국적 주제들은 명확하게 공유되지 못하며,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교육 현장에서 실험, 실천되는 경험들은 미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그 어떤 평화교육의 가능성들도 학교교육이 일시위주의 경쟁 교육이 우선되고, 교사들의 자율성이 제한을 받는 상황에서 쉽게 자리잡을 여지가 많지 않았었다. 더군다나 이데올로기적 통제 아래 비판적 평화교육이 위험시되는 교육 현장에서는 평화교육적 통일교육이나 인권교육은 시도 그 자체가 위험한 수위를 넘는 것이며, 관심과 과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기에 학교 현장에서의 실험과 실천은 더더욱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몇몇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유네스코의 협동학교나 국제 이해교육과 유니세프의 '지구촌클럽' 정도의 소극적 평화교육이 학교에서 실시하는 평화교육의 주류를 형성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서 90년대 중반부터는 학교교육을 통한 여러 제한을 벗어나 학교 밖에서 실시되는 대안교육적 노력이 전개되면서 평의의 평화교육은 여러 간래로 실천되어지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도 비공식적이지만 몇몇 교과교육을 통하여 평화교육적 관심들이 접목되고 오래된 전통인 '학급운영'의 경험들에도 평화교육적 이념과 철학이 녹아들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평화교육의 시도들은 공통적으로 '평화'에 대한 지식의 습득보다는 삶의 체험을 통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이루어내고, 구조적 모순과 사회제도로 인해 야기된 왜곡된 의식을 평화의식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과정들을 통해서 비판적 안목을 갖게 하는 비판적 교육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평화교육의 연구자적 인식이 부족한 입장에서 지금 우리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평화교육의 여러 사례들을 총망라하고 분석하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의 초점을 학교교육을 통한 평화교육의 실천 사례에 집중하고자 한다.

특히 '교실 속의 공존'이라는 프로그램의 실험과 통일교육의 시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더불어 사는 연습】

교실 속의 공존

오늘날의 교실은 갈수록 학급당 인원수는 줄어들고 교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늘어났지만, 일상적인 삶의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퇴색하고 기능적인 공간으로 변화되고 있다. 요즘 아이들은 한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만남을 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거의 절반의 아이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편견을 키워가며 건성으로 학교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교실이 사회의 축소판이라면, 그 속에도 매일같이 따돌리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편견과 불신의 사회적 문脈 현상이 점차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러한 교실 환경에서 잘난 쪽하는 아이, 끌지하는 아이, 풍부 잘하는 아이 모두가 각자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위축당하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삶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교실 속의 공존'의 목표인 것이다. 즉 아이 각자가 자신의 삶의 단위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타인을 존중하고, '나눔'과 '섬김'을 배우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하며, 자신의 현실과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안목을 길러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삶의 자세를 갖추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실 속의 공존'은 명칭을 달리 하여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어 왔었고, 그 대안적 프로그램들도 다양한 활동의 결과로 축적되어 왔다. 특히 교실 내에서의 학습과 생활의 기본 단위가 되는 모둠(분임조, 소집단)활동을 통한 '학급경영', '학급운영'의 프로그램이 발달하였는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97년에는 평화 교육에 관심 있는 교사를 12명을 통하여 '교실 속의 공존' 프로그램을 실험해 보았었다. 학교 생활의 흐름에 따라 3월에는 반장선거, 4월에는 교실꾸미기, 학기 말에는 마무리잔치 등의 계기성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하나의 예로써 '교실꾸미기' 활동은 기존의 '학급운영'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일회적, 전시적인 '환경미화'를 자기 방을 꾸미는 마음으로 함께 꾸미고 가꾸는 활동으로 전환하여 창조적 활동과 협력의 기술을 배운은 물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조직과 건설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줄거

움을 맛보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도 평화교육적 접근은 이러한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잘 구성되었느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여 협력하였느냐 보다는, 바빠서 먼저 가는 친구를 이해하면서 자신은 남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활동에 참가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꿈꾸는 비록 못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학급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계기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노력이 늘어나 학습의 효과도 배가되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변화에 더 주목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친구들을 사귀고, 학급생활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면서 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도 느끼며 나와 다른 친구에 대한 인간적 배려도 배우는 계기를 마련하며, 결국은 교실꾸미기 활동을 통하여 집단 속에서의 자신의 제 역할 수행을 통하여 자신의 제 자리를 마련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그러한 활동을 광존 교육, 평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학급운영'의 경험적 성과를 이어받으면서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과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제 관계들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태도와 가치의 변화, 기술의 습득을 배기로 평화를 이루어 내는 능력을 기르고,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을 교육하고자 하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모둠활동을 통한 광존의 노력에도 한계는 여전히 있는 것이다. 주변의 여건은 그대로인데 달달선생님들은 육십 내어 벅화질식 나열로 접근하기도 하고, '잘 하려는' 욕심이 앞서 교사 중심의 행사가 되어 학생들의 자율과 자발적 참여는 여전히 맴돌게 하고, 결국은 모둠을 통해 까리까리 친한 아이들 위주로만 생활을 하게 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교사는 활동의 촉진자로서 끊임없이 자신의 문턱을 낮추고,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수준을 낮추어 누구나 쉽게 다가설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작업이 세밀하게 마련되어져야 한다.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교육과정 연구】

평화교육과 통일교육

한반도에서의 평화교육은 그 역사적, 사회적 맥락으로 통일교육과의 관계를 벗어나서는 제대로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한반도에서는 '평화'란 우선 '남파북의 평화'(주변 강대국과의 평화를 포함하여)를 의미하며, 그것을 떠나서 평화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남과 북의 평화'는 민족의 생존을 보

장하는 절대 절망의 요구이며, 이것을 실현하는 것 자체가 남북 평화통일의 출발선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통일'은 힘의 우위에 의한 강제적인 통일이 아니며, 승패의 게임이 아니라 남북이 상호 존중하는 태도와 자세를 바탕으로 상호 합의, 협력하여 이루어 가는 통일이다. 이렇듯 분단과 전쟁 위기의 특수한 조건 속에 놓인 한반도에서는 '통일운동'에 '평화운동'을 그 기초로 할 수밖에 없고, '평화운동'은 '통일운동'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서 평화운동은 곧 통일운동과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다.

이러한 관심으로 지난해에는 기존의 통일교육을 비판해보고, 그 대안으로서 새롭게 접근하는 '평화교육으로서의 통일교육' 교육과정 안(案)을 설계해보고 직접 실험을 해 보았다.¹⁸⁾ 지식 정보 제공 중심의 기존 통일교육의 접근방법과는 달리, 인간과 사회를 대하는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제공하기 위한 '주제(theme)' 중심의 접근 방법을 선택하였다.¹⁹⁾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의 패러다임은 '남북이 같은 민족으로서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남북의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세와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그 교육적 목표를 남과 북의 차이를 수용하면서 대등한 관계에서의 통합의 접근을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의 형성과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상 생활에서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통일을 연습하는) 삶의 자세를 터득하고 실천하게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차이와 차별

'차이' '차별'의 학습은 평화교육의 주요한 내용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왕따', '학교폭력', '남녀차별' 등 학생들의 현실 생활에서의 당면한 문제이면서 동시에 통일을 바라보는 차별의식과 차별문화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18) 고사 6명의 실현집단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수업 활동, 플립활동, 땅과 후 활동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19) 평화교육의 수업모형은 크게 "issue를 중심으로 하는 workshop", "lifeskills ", "theme" 중심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theme"(주제)를 중심의 학습은 topic & workshop , project & workshop의 형식으로 구성할 수가 있다. 이러한 주제 중심의 학습을 1)서로 다른 존재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차별, 차이, 평화와 공존), 2)나와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불신과 신뢰, 사회적 공정성과 남북의 친화), 3)나와 우리의 문제를 누구의 힘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가'!'의존과 자주, 주인의식과 자주통일' 등 세 개의 큰 주제군을 추출하였다.

극복하여야 할 반통일의식의 바탕에 관련된 문제이며, 또한 통일의 방법과 통일 후 통일 사회에서의 우리의 삶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포함하는 인식의 틀이다.

남북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정신과 문화는 '당위'적인 논리의 설과나 지식·정보의 제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적 자세와 태도의 변화로부터, 그리고 그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교육은 학습자가 생활 속에서 '화해와 협력', '타자와의 공존'의 문화를 체득하고 실천해 나가도록 돋는 것이어야 하며, 생활상에서 '평화 사랑'과 '타인 존중'을 실천하는 연습을 하는 데서 출발되어야 한다. 이런 통일교육이 될 때, 우리 민족의 통일이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생활 속에서 준비되고 내가 참여하는 과정으로 학습자에게 다가갈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통일교육을 새롭게 인식할 때, 통일교육은 이미 평화교육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교육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차이와 차별'을 주제로 한 교육과정을 1단계 [생활 주변에서 '차이와 차별' 현상 발견하기], 2단계 [사회적 차별 분석하기], 3단계 ['차이와 차별' 현상의 인식률로 남북 통일 문제 바라보기], 4단계 [나 자신의 생활 자세·태도 돌아보기]로 설정하고 설문조사를 통하여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남녀차별', '장애인차별', '인종차별'을 주요 소주제로 설정하여 수업계획안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매 수업의 기본 과정을,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하여 (1) '영상(자료) 보여주기나 놀이'를 통한 [동기유발], (2) '문제의 제기와 해결책 모색'[전개], (3) '소감 말하기'[마무리] 형태로 구상하였다. 그리고 이 공동지도안을 바탕으로 각자 자신의 실정에 맞게 - 담당 학년, 과목, 학급인원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 지도안을 재구성하여 실제 수업을 실시하였다.

수업의 결과는 각 실험집단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렇게 쉽게 단언할 수 있는 바는 아니었다. 최소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른에서 출발해야 한다. 다르기 때문에 통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는 것을 맛보았지만, 전반적으로 실험교사들의 능력 부족과 준비 불충분으로 수월한 수업이라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단순한 인식의 틀을 제공하고서 변화를 유도하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문제는 무엇이 차별적인 행동인가를 구별해 내고, 그러한 행동을 방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반면에, 바로 그 차별을 낳는 마음 자체를 없애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공존의 교육은 그것이 가치나 태도의 형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병행

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프로그램의 연구도 준비되어야 하며, 다른 주제군의 연구도 병행하여, 실제 학교에서는 대상별, 수준별, 관심에 따라 수업을 진행해야 할 과제를 남겨놓았다.

【평화교육의 방법론의 개발】

평화교육의 시도

평화교육에서는 내용만큼이나 그 교육방법이 중요하며, 이점은 적절한 교육과정의 개획과 교수방법, 기법의 선택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평화교육을 시작하는 데 있어 한 가지 길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평화교육의 방법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모르기보다는 평화교육의 관심을 교육적 상상력으로 재구성하고, 소화하여 아이를 수준으로 다가어서 아이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다시 황의적으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의 개획과 그 실행에서의 프로그램의 구체성에 대한 고민이 앞서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점이 많을 것이다.

평화를 위한 교육이든, 평화교육이든 학교 현장에서의 평화의 교육은 '평화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교사 개인의 우발적이면서도 자발적인 여러 어려운 시도에서 출발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이 한 사람이나 소수의 집단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생각지도 않은 방향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새로운 교육의 시도는 어떤 특정한, 외국의 경험적 사례에 의존하는 전형적인 방법론이 있다기 보다는 처음에는 개개인의 실험적인 시도에서, 혹은 이러한 대안적인 방법에 동조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비롯될 것이다.

평화교육의 방법론

평화교육의 방법과 기법의 적용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법의 문제도 대상과 목표와 내용에 따라 적절한 방법과 기법이 구사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어느 교과나 다를 바 없이 지도방법은 주입식방법(expository teaching)과 탐구식방법(inquiry teaching)으로 양분된다. 반면에 지도기법은 교사가 그의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의 선택이므로 그 기법은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의 방법의 문제는 교사들의 철학이나 자세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접근의 문제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여 평화적 삶의 가치를 수용하고 내면화하는데 역점을 둔다면 평화교육의 성격은 절과 치량적이기보다는 과정 중심의 교육방법이 우연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화교육의 방법은 학교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방법론에서 탈피하여 방법론을 다원화하는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자신과 이웃 그리고 세계에 대한 개인의 간수성 훈련에서부터 크게는 정치적 의식화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구체적 사안에 대한 구체적 문제해결의 방향이 가능한 방법으로 열려 있어야 한다.²⁰⁾ 결국은 평화교육은 개인의 의식과 삶을 변화 시켜나가는 가치교육적 성격과 정치 교육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평화적으로 식자화하는 프로그램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명료화하는 작업이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교육을 위한 학습이론

-구성주의 이론-

평화교육에 적용해 볼 만한 학습 이론에서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학습자들의 성장이나 학습은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하나의 '선물'(product)이 아니라, 하나의 끊임없는 과정(process)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학습자인 학생들에게 있어 실효적인 평화교육의 경험은 '평화'의 지식이나 정보의 학습보다는 생활 속의 체험을 통한 그를 나름대로의 '평화'를 위한 지식을 적극적으로 구성해 가는 접근방법을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구성주의적 교육의 핵심적인 원리는 상호 존중이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하는 하나의 사회도덕적 분위기 (a sociomoral atmosphere)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그들의 학교생활 공간에서 그들의 경험을 이루고 있는 전반적인 인간 관계들의 평화적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면서 '평화'의 가치를 체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의 사례로는 기존의 '학급운영'의 경험들이 산재해 있으며, '자치'를 중심으로 한 학생생활의 여러 시도와 프로그램들을 꼽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들은 점차로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들이 그들 자신

20) 장순원, 「한국 평화교육의 성격과 실제」, 『한일 평화교육』, 제 1회 한일평화교육 심포지엄, 1997, p70

의 문제임을 깨닫게 하고, 그들 스스로 하여금 그러한 갈등들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고민해 줌으로써, 자율성을 신장하고, 공동체에 대한 개인의 책임감도 배양하면서 스스로 평화능력을 형성해 갈 수 있는 것이다.

-협동학습(cooperative learning) 이론

이질적인 학생들로 구성된 소규모의 집단을 수업 과정에 활용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개개인의 학업 성취와 더불어 다른 학생들의 학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로 만드는 하나의 구조화된 학습 양식이다. 협동학습은 상호 의존성과 개별적인 책임감을 강조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준다.

-봉사활동학습(service learning) 이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교과 지식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 및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학습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봉사활동 학습은 자원봉사 활동과는 달리 교과 학습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있어서 숙고와 성찰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지식들을 자신 및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줌으로써, 상호신뢰와 협동, 참여와 배려, 민주적 의사 결정에 바탕을 둔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학습과 실천의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실질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고(peace making), 공정적인 역할 수행을 통하여 평화를 구축하고(peace building), 증진시키는 (peace improving) 경험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평화교육의 운동적 과제

한 개인이나 소수 집단에 의해 시도된 평화교육의 노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동료 교사들이 적극 수용하면서 스스로 평화교육의 접근을 다양하게 접목시키는 것이고, 학교 생활 전반에서의 학교 차원의 교육의지가 반영되어 갈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인권교육이든, 평화교육이든 그것이 학교 현장을 단위로 연구되고 실천되기 위해서는 상위의 교육기관이 일방적으로 제시된 교육과정으로 실시를 강요하거나, 학교 현장에서의 파격적인 실시를 의무화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이다. 의식 있는 교사에게서 시작되고, 그 교육의 과정은 학생 스스로 구성하고 협동하면서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교육은 학교교육 뿐 아니라 삶의 전과정에서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한복판에서 이루어지는 평생 및 생활교육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평화교육을 계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학교교육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지역의 교육현장, 연구기관, 시민영역이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대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즉 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은 학교 밖에서의 평화교육과 상호 보완적이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평화의식을 증진시키는 의미에서 평화교육은 시민운동에 기초한 평화운동과 긴밀히 연관되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렇게 시도되는 평화교육의 방법들이 학교 안에서는 여전히 비공식적으로 몇몇 교과 수업에 접목되거나, 클립활동 등에 활용되는 수준에 만족될 수는 없다. 평화교육의 교육과정은 평화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적 문위기도 차못 중요한 것이다.

학교에서 추진되는 평화교육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학교의 새로운 문화 창조의 흐름으로 발전되어야 하며, 학교가 근거한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학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이것은 적어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어지는 연계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문화 속에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지켜보아야 하고, 그러한 관심과 노력이 지역 사회를 바탕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프로그램들을 공동으로 수행하면서 평화적 정서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마을 문화의 형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결국 평화교육은 삶의 가치를 동반하고, 실제적인 삶의 평화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으로 학교를 벗어나 가정, 이웃, 지역사회에서 실천되고, 다시 학습되어져야 평화운동으로의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지금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대안교육을 비롯한 평화교육의 여러 시도들은 그것이 지역이라는 실천적 단위를 벗어나서는 단지 실험적 한계를 벗어나기가 힘들고, 학교 현장에서의 평화교육의 시도들과 협력하여 새로운 지평을 넓혀 가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교육의 외국사례와 국내 평화교육에의 적용

- 분단 사회의 평화교육 -

강순원 (한신대 교수)

우리 자신이 매우 폭력적이고 통제된 사회에서 살다보니 자연스럽게 이와 대비되는 덜 폭력적이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이런 자연스런 편향성이 개인적으로 평화교육에 관심을 갖게 한 원인이었다고 한다면 너무나 비학문적인 자세로 보일 수도 있겠다. 어쨌든 내가 사는 분단된 비민주적 삶의 조건으로 인해 평화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평화교육 일반에 대한 논의보다는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아픔을 안고 있는 분단국의 평화교육에 대해 경험을 나누려 한다.

개인적으로는 아주 우연하게 1995년 북아일랜드와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기획하였던 '공존(Coexistence) 프로젝트'에 옮저버에 10일간 참여하였다. 이때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미국인 수녀 Carol Rittner는 대상국을 분단을 경험한 모든 국가로 놀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 독일, 남아공에 각기 관련자를 초청했지만 일정상의 문제로 한국측에서만 참석하였다. 덕분에 완전 제3자로서 멀홀간 이들의 활동을 기록하면서 처음의 태도와 중간,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 평화교육에 대한 논의 그리고 활동에 대해 충분히 관찰할 수 있었다. 이후 계획을 구체화시키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실행에 옮기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주지하다시피 양국가는 우리보다 훨씬 대립적이고 실제 늘 테러와 살상이 일어나는 매우 비평화적인 상태에 놓여있다. 일반적으로 평화하면 중동평화를 떠올릴 정도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는 심각하며, 유럽에서는 북아일랜드

문제의 해결이 유럽평화의 핵심으로 떠오를 정도로 북아일랜드 개신교와 구교도 사이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이스라엘의 선호하는 평화교육정책으로서 공존모형은 사실 이스라엘 밖의 팔레스타인과의 공존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의 공존을 말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적성국이기 때문에 오직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 없고, 사실 이를 위해 엄청난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존모형에서는 팔레스타인에 우호적인 이스라엘 내 아랍인들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이들이 어떻게 하면 수용하게 만들 것이냐를 논의하고 구체화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공존 프로젝트의 대부분의 비용이 미국거주 유대인들의 트러스트에서 나온다는 점이 이를 엿볼수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공존모형은 점의에 기초한 평화교육 모형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여전히 이스라엘내 아랍인은 국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포트가 다른 2동시민으로서 일거수 일투족을 철저히 감시당하며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산다.

그래서 북아일랜드 즉 일부 활동가들은 공존프로젝트라는 말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 문제의 통합에 의한 공존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기초한 정의로운 평화구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양파의 일장이 무척 다르다. 북아일랜드의 경우 구교도와 신교도 사이의 평화에 대한 문제인식과 해결방안 역시 너무나 대립적이고 인식의 차가 커서 서로 다른 곳을 보면서 다른 맥락의 평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구교도의 경우 미국의 영향력에 어느 정도 의존하면서 영국에 압력을 가해 영국으로 하여금 절진적으로 철수하게 만드는 것임에 반해, 신교도의 경우엔 선구교도 모두는 아일랜드인으로서 기독교인이라는 단일정체성(single identity)을 강조하면서 자주적 해결 가능성을 말한다.

공통적인 것은 어쨌든 폭력을 용인하지 말자는 것과, 정치적 결단 못지 않게 평화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한 평화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한다는 점이다. 특히 삶의 거주 공간, 교육 환경, 직업환경, 놀이문화 등등이 양 종파에 따라 판이하게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함께 살아가는 (living together) 혼합거주지를 조성하느냐가 관건이기도 하다. 그래서 평화교육에서는 서로에 대한 대면 인식의 계기를 높이고 편견을 줄이기 위한 민남의 모형(meeting together)을 그리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으로 정착된 북아일랜드 평화교육 모형이 상호이해교육(Education for Mutual Understanding)이다. 아일랜드 역사를 민족발문관에서 양측의 학교 어린이가 함께 공부한다거나, 학교에서의 공동학습(joint learning)을 통해 음악, 미술, 글쓰기를 함께 하고, 2-3일간의 평화캠프를 하면서 친구가 되는 등 상호이해

교육의 폭은 현재 북아일랜드 교육행정당국이 주도할 정도로 정착되고 있다. 하지만 이점 역시 구교도의 경우 단일정체성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공화국 사이의 관계형성으로 보는 지평선(Horizon)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보는 반면, 신교도의 경우엔 북아일랜드내의 신구교도간의 단일정체성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이해교육의 실상은 매우 대립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북아일랜드 평화교육가들은 상호이해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들간의 긴장과 갈등이 성인 세대보다 훨씬 덜하다고 믿고 있다. 현재 이루어진 평화회담의 결과 학교에서의 평화교육은 훨씬 더 진척될 전망이 있다.

한편 남아프리카공화국(Republic of South Africa)의 경우 백인정부의 아파르트하이드(Apartheid)정책에 의한 흑인차별정책에 따라 발생된 사회적 폭력화 문제는 흑인 인권 대통령 만델라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구조적 문제의 불씨는 꺼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노정된 흑백간의 민족격차, 사회적 차별, 문화적 공간의 괴리, 상대적 피해의식 등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폭력화의 정도는 이전 백인 정부하에서 보다 더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갈등과 차별을 넘어서 흑백간의 평화교육이 전개되고 있다. 인구분포상으로는 흑인이 백인보다 많지만, 교육이나 고용과 같은 사회적 기회 부문에 있어서는 역전되어 흑인의 참여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흑인을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과 아울러 이들의 인권의식 제고나 민주주의를 위한 평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니 많은 지향에 여전히 무딘하고 있다. 결국 시민운동단체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SADTU(South African Democratic Teachers Union)같은 교원단체에서 적극적인 평화교육안을 만들어 실시하여야 한다. 절자가 케이프 타운에 있는 Quaker Peace Centre를 방문했을 때 평화교육활동가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흑인과 백인 두명이었다. 백인 활동가인 앤드류는 자신을 소개한 뒤 인종적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자기들은(흑인과 백인 활동가 중히) 꼭 함께 행동한다고 설명하였다. 현재 평화센터에서는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갈등해소 능력을 키우는 것을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이것을 위해 학교에 나가 교사나 학생, 학부모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평화교육의 전면에 절대로 인종갈등 문제를 내세우지 않고 일반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해석하고 인정한다는 보편적인 평화교육 방법을 따른다고 하였다. 이 점은 병구 교육부장관도 인식을 같이 한다. 즉, 평화교육이란 평화를 가르치는 특수한 교육영역이 아니라 모든 교육 자체가 인권의식에 입각한 평화교육의 원리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독일의 경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서독이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경험을 하면서 과거 나뉘어졌던 이들이 하나로서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 가는 것이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독일에 여러차례 가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일이 쉽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사실 독일이 2차대전 이후 세계평화를 침해한 주요국가로 지목되면서 평화교육의 주요 주제는 어쨌든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자는 것이었고 그 이름은 평화교육이 아니라 정치교육이었다. 이후 유네스코 평화교육안이 1970년대 확산되고 독일내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평화교육이 상당히 자리잡아 나아갔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폭력에 대처하는 평화교육, 전쟁반대를 위한 군복무를 대체한 사회봉사, 이민자들의 통합을 위한 평화교육, 동성애자의 평화교육 등등이 전개되고 있었지 동서독간의 통일을 위한 평화교육은 1989년까지 있어본 적이 없다. 동서독 양쪽에서 그런 유의 보편적인 평화운동과 교육이 전개되었고 분야별로 힘써하기도 했다.(예를 들어 환경이나 여성문제..) 결국 이런 흐름은 통일이라는 특수한 독일의 주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보다는 일반론속에서 자기 문제를 해석하는 방식을 취하다보니 오늘날에도 독일에서는 동서독간의 화해와 이해, 일치를 위한 평화교육이 프랑스와 독일 청소년의 평화교육보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아이로니를 낳는다.

이상과 같이 분단국가의 평화교육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몇 가지 정리하고 싶은 평화교육의 주제가 있다. 첫째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평화교육의 맥락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이다. 두번째, 일반론과 특수성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 어린이들이 굶는 것과 소말리아 어린이가 굶는다는 사실을 동질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다른 차원에서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 평화교육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셋째, 비폭력적 방법에 의한 갈등해소능력을 키우는 것이 평화 교육의 목적인데 분단국에서는 여전히 폭력이 비폭력보다 가까이 있고 손위운 해결책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개인적인 수준의 문제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의 논의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넷째, 평화교육의 핵심적 주제 중의 하나가 전쟁억지교육 및 전쟁반대교육인데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코소보 사태나 걸프전 같은 것이 자국의 이해 때문에 핵심적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독일에서 나찌하의 홀로코스트 교육만이 평화교육의 이름으로 시행되어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며 현재 진행되는 전쟁속에서 자행되는 비인간성을 폭로하고 억지시키는 살아있는 평화교육이 되어야 한다.

여성평화교육의 방법과 프로그램 제시

윤명선 (다솜학교 교장, 공동체문화원 원장)

1. 가정에서의 평화교육

그동안 우리는 평화에 대해 말을 할 때 거창하게 말해 왔다. 그러나 평화가 삶 속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나 커다란 행사와 행행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평화가 실뿌리처럼 스며들게 해야 한다. 평화란 말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생활습관이 자연스럽게 평화를 지향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평화란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것 뿐 만 아니라 평화에 대한 우리의 사고나 우리의 표현도 일상생활속에서 늘 표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평화운동을 한 선배중 “세계 평화는 가정에서부터”라고 말한 까닭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삶의 뿌리인 가정에서 여성의 자리가 크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성평화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평화의 기본구조인 상호간의 이해, 존중, 신뢰, 인정, 협력의 턱목이 남녀노소, 민부귀천 등 어떤 관계속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이 도와지 되는 가운데 극심한 경쟁속에서 교육받으며 생활해 온 사람들이 세계속에서의 평화를 외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2. 이런시절의 평화교육

결국 세계를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며 그 사람의 성격이 만 6세가 되면 거의 형성된다는 데 어렸을 때 형성된 성적으로 일생을 살아간다면 세계평

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차라운 가정의 바탕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물어야 한다.

여러서부터 평화에 대한 정신과 태도가 다듬어지지 않고서는 어른이 되어 평화를 말하는 것은 이미 늦다. 어렸을 때에 평화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이 어른이 되어서 평화운동을 한다고 해도 지적 허위성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론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그 자신이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들이 힘을 쓰는 모습을 보자. 한 아이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을 때 처음에는 자기에게 달라고 부탁한다. 그래도 안주면 “그리면 네하고 다시는 안놀아” 라며 협박한다. 그래도 그것을 얻지 못하면 화 뺏어가지고 달아난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이미 가정이라는 체계속에서 힘을 어떻게 쓰도록 교육 받았는가? 를 알 수 있다. 이런 행동을 가지고 평화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테마 인데도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있다. 이런 행동을 보는 어른들이 오히려 웃으면서 재미있어 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평화교육은 대화를 통해서 훈련한다. 평화교육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교육이며 평화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 좋은 인격으로 자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키우는 교육이다. 어릴 때부터 평화교육을 받고 자연스럽게 평화를 지향하는 문화속에서 성장하며, 사랑과 고통을 함께 나누어 보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훈련을 받게 되면 획일적인 절론을 내리려고 하지 않고 각기 다른 목적을 추구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면서 합의를 도출하며 평화를 지향하게 된다. 평화교육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3. 사회안에서의 여성평화교육

사회를 열려하는 여성들에게 평화교육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가부장 문화를 배격하고 권위주의를 거부하는 여성운동가들이 갖추어야 할 평화적인 인성을 위해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풍물체적인 교육이 있어야 한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그 말은 여성이 리더쉽을 발휘한다는 말과도 같다. 지금까지 해 온 남성의 시대와 달리 여성의 힘이 커지더라도 남성을 소외시키지 않고 함께 잘 사는 것이 평화이다.

여성단체의 시스템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상·하의 구별이 뚜렷이 있고, 자기 회생이 필요할 때는 침묵하거나 소극적이었다가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자리에

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회장이나 일원들의 오랜기간의 연임, 개인이 기주의 뿐 아니라 자기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혀 양보하지 않는 태도 등 이런 것들이 극복되고 더 나아가 세기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혼돈된 의식들이 정립되어야 한다.

4. 통일을 위한 평화교육

동·서간의 갈등과 남·북 대립을 화해시키는 교육

평화를 위해서는 행사와 교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통해서 교육을 할 수 있고 교육을 하면서 행사를 벌일 수 있다. 동·서간의 갈등이 심각한 현상들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

자유를 찾아 남한에 온 여성들과 진정으로 한겨레의 자매애를 가지고 살 때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5. 세계평화를 기대하는 평화교육

세계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난 후에는 국가기관이나 세계기구에 여성들을 파견시켜 구체적인 힘을 키우도록 까지 해야한다.

▣ 평화교육 실천에 필요한 기본원리

평화교육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기본원리가 있다.

1) 어려서부터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평화교육은 민주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내용이 그런 만큼 교육하는 방법도 창의력을 키울 수 있고 민주적이어야 한다. 한 사람이 강의를 하고 다른 사람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들은 후에 느낌 나누기나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넣는 것이 좋다. 작은 공동체로 나누어 작업을 한 후에 다시 큰 공동체로 모여 발표를 한다. 작은 공동체에서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말로 표현하는 것 뿐 아니라 그림, 음악, 연극, 춤, Mime, 코미디 등 예술성이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게 한다.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그만큼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재미도 함께 느끼게 된다. 그러면 지성, 감성, 도덕성이 함양된다.

2) 어릴 때 받은 평화교육의 영향이 어른이 되어서도 지속되어야 한다.
평화운동을 한동안 하다가 그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 살 버릇 여든
까지 간다는 원리가 평화운동에 적용되도록 한다.

① 이러한 원리를 가지고 평화만들기를 위한 여성들의 기초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받은 것을 집안에서나,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서 실천한 것에 대해 경험나누기를 한다.

③ 여성교육의 새로운 장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의 교육참여를 유통해야 한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평화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그다음 부부, 자녀들, 조부모 등... 온 가족이 함께 하는 Camp를 열 수 있다. 자녀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아빠의 입장에서 그들의 언어로 평화만들기에 대한 느낌, 경험, 생각,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이것은 평화교육이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 평생 계속되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치유될 수 있고 상실된 영혼을 되찾아 서로를 들보고 살며 화해와 관용의 쪽이 넘어질 수 있다. 또한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게 되며 나아가 주위 사람들이 같이 지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다. 사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3) 평화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기에 힘들고 외로울 수 있으나, 평화를 깨는 사랑에 대해 도전해야 하므로 용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정의가 깃든 평화이기 때문이다.

● 평화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주제들

- 새 시대의 새 인간 이해(여성과 남성은 등등)
- Life Story와 대화(여성의 상처, 한을 치유함)
- 놀이 문화와 공동체(보람과 재미가 어우러 질 수 있음)
- 우리는 하나(제충간, 동서·남·북 등 일치를 위함)
- 우리나라(국가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움)
- 아시아와 함께 하는 한계례(아시아의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 우리는 세계의 이웃(세계인으로서의 자세)
- 함께 사는 자연
- 우리가 만드는 꿈통체(2020년: 20년후를 미리 생각하며 지금부터 준비하는 교육)
- 지구촌 살리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환경회의(국제회의 놀이)
- 정의가 깃든 평화(평화의 개념)
- 한국인-글로벌 마인드-세계인(지방자치체의 개념을 세계와 함께 생각하게 함)
- 연극과 함께-거울(여름)동산 열린 무대(평화교육은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예술을 통해)
- 우리가 만드는 방송(방송을 통한 평화운동을 위해)
- 하세와 거짓 없는 세상 만들기(IMF 극복)
-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 교육방법 (개인작업, 공동작업 병행)

- 강의 · 대화, 기초연론 · 토론, 그룹토의 · 연극, Mime, 역할극, 영화감상
- 음악 : 악기, 가창, 작곡 · 미술 : 그리기, 도자기, 모자이크, 전통회 판报复
- 춤 : 특히 민속춤 · 신문 만들기 · 방송 만들기(비디어 교육)
- 글쓰기 · 명상 · 전학 · 캠프

● 프로그램 제시

평화교육의 중요한 점은 우선 “나를 알아 나의 정체성을 찾는 것”과 “너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라는 꿈통체성을 갖는 것”이기에 여기에 3박 4일 캠프와 가사를 통해서 평화교육을 할 수 있는 노래를 소개한다.

- 주제 : 자기 발견의 여행
 - 애니어그램 캠프 -
- 교육대상자: 어린이, 여성, 가족, 직장, 단체 - 모두 다 할 수 있음.

"자기 발견의 여행"

시간/요일	첫째날	둘째날	셋째날	넷째날	
오전 06:00		일 어 나 기			
06:30		명상 및 산책			
08:00		아침 먹자			
08:30		에너지그램 I	에너지그램 II	에너지그램 III	
09:00					
10:30	간식 먹으며...	음악 그리고 워크		마감행사 준비워크샵	
11:00	서로 알기	이야기 공동체 I	자기 발견 I	마감 및 평가	
오후 12:30		밥 먹고 힐시다			
2:00	개회 강연	이야기 공동체 II	오솔길의 흔적	집으로....	
3:30	휴식	음악 그리고 간식			
4:00	나의 성격은?	자기 표현 (그림, 공작)	자기 발견 II		
5:00	저녁밥은 든든하게				
7:00	나의 정체는	작은 발표회	전치준비		
8:30	즐 명상	여탈곡			
10:00	잘 지냈지 ???		경축 "자기 발견"		

① 서로 알기

- 방배정, 모듈별 짜기
- 낯선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기

② 나의 성격, 나의 경제는?

- 4명으로 작은 공동체를 한다.
- 자기를 책관화시킨다.
- 모든 사람은 대부분 2살에서 6살이면 자신의 성격이 확정된다. 그 이후에는 그 형 성된 성격으로 평균화를 사느냐 그 이하나 그 이상에서 빗어나지 못하고 반복된다. 자신의 인성유형을 바르게 깨닫는다면 자신의 인격형성에 도움이 된다.
- 화나는 때는 언제고 화 안내려고 하는 데 화가 나는 때는 언제인가 연구해 본다.

③ 춤명상

- 명상음악을 통해 상상의 나래를 펴본다.(미운 사람을 초대하여 그 편계를 풀어 본다)
 - 명상음악을 미동 없이 들어본다.
 -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몸을 움직여 본다.
 - 명상음악을 들으면서 몸의 리듬을 탄다.
- (감정이 움직인다 → 해방감을 경험할 수 있다)

④ 애니어그램 I, II, III

- 사람의 성격에는 9가지 유형이 있다.
- 자기 성격을 파악해서 자기를 발견하며 건강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다.
-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워크숍 형태로 한다.
- 강의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심화시킨다.
- 생활 전체에 애니어그램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 (건강하고 유연한 삶이 된다)

⑤ 음악 그리고 쉼(간식)

- 과일과 야채등 자연식품으로 한다.
- 음악을 들으면서 혼자서 생각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한다.

⑥ 노동수련

- 땅에 묻힌 비닐을 파낸다.
- 설거지

⑦ 이야기 공동체 I, II(나의 성격,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 I. 4명으로 작은 공동체를 한다.
 가장 어렸을 때의 기억을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도록 한다.
- II. 4-6살 까지를 국한하지 않고 지금까지로 확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해설적인 내용을 되풀이 한다. 분석적, 비판적 눈은 없어도 감성적이다.

홍그림, 공작

- 이야기 속에서 표현할 수 없는 감성을 그림이나 韻書, 팽거페인팅 등 자연스럽고 다양하게 표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어제 어렸을 때 받은 상처를 이야기로 했던 것을 다시 그림으로 표현한다.
- (개인작업)

정오술길의 흔적

- 산으로

⑧ 작은 발표회(단체작업: 역할극)

- 그림, 공작시간에 표출해 보았던 그림이나 이야기 등으로 자유롭게 자기를 표현 해서 발표해 본다.
- 30분은 준비, 30분은 표현, 30분은 악할 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해 본다.

⑨ 경축 “자기 발견”

- 해방감을 느끼게 도와준다.
- 자기가 꾸미고 싶은 복장을 하고 나온다.
- 이 날은 참을 안하고 밤을 새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평화 이룰 수 있어

시·곡 윤명선 / 음우호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ive staves of music. The first three staves are in G major, while the last two are in F major.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each staff, with some lines repeated across staves.

Staff 1:

내가 가진 작은 사랑하나
너에게 있는 작은 괴롭하나
너와 내가 가진 믿음으로

너에게 나누어 주면
내가 가지 고민하면
서로 보듬어 주면

우린
우린
우린

Staff 2:

복된 마을 지나고
행복한 마음 지나고
희망찬 공동체 되어

평화 이룰 수 있어 어
평화 이룰 수 있어 어
평화 이룰 수 있어 어

Staff 3:

평화 평화 평화 이룰수있어 -

Staff 4:

평화 평화 평화 이룰수있어

Staff 5:

— 4 —

DS

평화 이룰수있어

평화통일교육의 제도적 정착방안

윤미량 (통일부 정책기획과 서기관)

1. 평화교육의 현황

□ 공산국가의 탄생 이후 “평화”라는 단어가 지니는 긍정적 속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평화교육에 대해 열의를 보이지 않았음.

· 그 이유는 “평화” 및 “평화교육”的 개념이 다양하여 혼란을 자아낸 것에도 비롯하였으나, 보다 크게는 “평화=무조건적 전쟁의 거부”라는 개념이 구소련의 선전기관에서 전파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Birgit Brock-Utne, Feminist Perspectives on Peace and Peace Education, p.80)

· 즉 민주국가에서는 평화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구소련의 선전에 따라 청년들이 무조건 전쟁에 반대하거나 짐길을 거부하게 됨으로써 결국 공산주의의 승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

□ 때문에 평화교육은 대부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실시되는 경우보다는 주로 여성단체 등 민간의 활동에 의해 자발적으로, 그리고 산발적으로 실시되어 왔음.

· 서구제국에서 여성계가 평화운동의 제도적 역할을 담당해 온 것처럼, 평화교육에 대한 국제적 강조는 4차례 걸친 UN 세계여성회의의 결의안에서 비로소 본격화되고 체계화 됨.

- o 우리나라에서도 평화교육은 유사한 경로를 걸어옴.
 - 북한의 선전매체가 주장하는 “평화”라는 단어는 곧장 “무조전적 군비축소”, 즉 미군 보유무기 및 주한미군의 철수, 병력 감축 등을 함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평화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았음.
 - 교회 혹은 여성계 중심의 평화운동에 대한 시각도 따라서 다소 회의적이었음.
- o 최근에야 우리나라에서도 평화교육이 공론화되기 시작함.
 - 이는 UN 세계여성회의 거듭된 평화교육에 대한 강조 및 소모적 체계검정을 넘어서 민족의 번영을 모색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o 그러나 아직 학교 등 공적 교육과정에서 평화교육이 제도화되기는 요원함.
 - 아직은 민간의 평화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장치도 결여된 상태임.

2.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

- o 지난 1월 국회에서 「통일교육지원법」이 통과됨으로써 체계적·종합적·효율적 통일교육 실시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음.
 - 지금까지 통일교육은 통일교육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 학교교육·사회교육·매스미디어교육 상호간의 연계가 없이 교육기관·교육담당자에 따라 상이한 교육내용과 방식으로 실시됨으로써 내용상 편차가 심하였고
 - 또한 민간이 시행하는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민관협조가 곤란했음

○ 「통일교육지원법」은

- 통일교육은 정파간의 이해관계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고 친명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동시에 헌법에 배치되는 과정적 통일교육 및 국단적 냉전교육 양면으로부터의 폐해를 방지하고
-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을 통해 국가적으로 통일교육의 일관성과 통일성 및 상호 연계성을 확보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민·관 합동으로 "통일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도록 하여 통일교육에 관한 국민적 합의 및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통일교육 실시자에 대해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통일교육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음
- 현재 평화교육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 「통일교육지원법」은 평화교육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우리의 통일정책은 한반도에 전쟁이 제발되어서는 안된다는 평화통일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음. 따라서 통일교육의 핵심내용 중의 하나는 평화교육이 될 것임.
- 따라서 통일교육실시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통일교육 실시자에 대한 경비보조는 법 제6조(정부의 임무)에 규정되어 있는데

- 제①항 : 정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요원의 양성·지원, 교재의 개발·보급 기타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한다.
- 제②항 : 정부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다만 현재로서는 시행령(대통령령)이 제정 중에 있고, 예산협의도 진행 중이므로 민간 통일교육 단체에 대한 지원의 대상, 방법, 규모 등은 법이 시행

(99.8.6)되고, 2000년도 예산이 확정되는 금년 하반기이나 구체화 될 수 있음.

- 정부는 통일교육지원법이 평화교육을 포함한 통일교육의 활성화·제도화에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임.

3. 평화교육의 활성화·제도화를 위한 당면과제

○ 조만간 통일교육지원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실시될 것임. 우선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평화교육이 경비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민간에서는 평화교육을 내실화하고 꾸준히 확대해 나감으로써 정부가 평화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법인의 비중을 인식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의 의지와 능력이라고 생각됨.



